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7
----------	-----

발의연월일 : 2024. 10. 10.

발의의원 : 김상수, 박경원, 김지훈(국),
이상기, 이진환, 김지훈(민),
김영실, 이수련

1. 제안 이유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수립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주민 또한 공익성에 대한 공감의 인식을 가지고, 실질적 주민참여가 가능한 도시계획 체계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2. 주요 내용

- 가.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 주민참여 기회 제공, 주민의견 수렴 등을 신설(안 제2조제2항)
- 나. 주거지역의 주거시설 유입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3종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안 제47조제1항제5호)
- 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 일원화(안 제60조제2항)
- 라. 조례 제2282호에 대한 부칙 경과조치 및 적용례 신설(<조례 제2282호, 2024.10.02.>)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6. 관련 법령 : 덧붙임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 체계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주민의견 청취)”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로 한다.

제4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제59조의 제목 “(회의의 비공개 등)”을 “(회의의 비공개)”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의 제목 “(회의록)”을 “(회의록의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3조의2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관련 심의(자문을 포함한다) 대상의 인·허가(공고·고시 등을 포함한다)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2282호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20 제6호의 경우 202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해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의 적용을 받는 계획, 허가, 인가, 신고 등(이하 “인허가 등”으로 한다)을 신청한 경우와 이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2. 제1호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인허가 등을 이 조례 시행 이후 변경하려는 경우

3.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을 증축, 재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제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용적률의 적용을 받는 계획, 허가, 인가, 신고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5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이후 심의 건을 최초 심의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생략)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 체계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생략)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① (현행과 같음)
제4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70퍼센트 이하(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제59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	제59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전·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관련 심의(자문을 포함한다) 대상의 인·허가(공고·고시 등을 포함한다)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0조(회의록) (생략)

<신설>

<신설>

<신설>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제60조(회의록의 공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3조의2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관련 심의(자문을 포함한다) 대상의 인·허가(공고·고시 등을 포함한다) 등이 완료되지 않은

조례 제2282호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단, 별표 20 제6호의 경우 2
02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2282호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20
제6호의 경우 2024년 11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제47조제3항 및 제
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
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해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
른다.

1.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용적률의 적용을 받
는 계획,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하 “인허가 등”으로 한다)을 신
청한 경우와 이에 따라 행정행
위가 이루어진 경우
2. 제1호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인허가 등을 이 조례
시행 이후 변경하려는 경우
3.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건축

<p><u><신 설></u></p> <p><u><신 설></u></p>	<p><u>물을 증축, 재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u></p> <p><u>제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용적률의 적용을 받는 계획, 허가, 인가, 신고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p> <p><u>제4조(위원회 운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5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이후 심의 건을 최초 심의로 본다.</u></p>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나. 재정 수반 요인

- 없음

-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기회 제공, 용도지역 내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 첨부 사유

조례 개정 후에도 예산의 증감이 발생하는 사항이 없음

4. 작성자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8. 6.>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 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